



▲5·18 교육관
구속부상자회 위탁 운영



▲5·18 기록관(5월 개관)
광주에서 직영

할 일 없어질라...속타는 5·18기념재단

각종 공익사업 운영 제외...핵심사업 축소 우려 차별화된 사업전략 세워 위상·역할 재정립해야

5·18 기념재단이 창립 21년 만에 가장 큰 벽에 부딪혔다.

5·18 기념재단의 핵심사업과 유사하거나 맞먹는 각종 공익사업들이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은 그간 민주·인권·평화 지원사업과 교육사업, 5·18 기록물 수집·연구·조사사업을 주축 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일각에선 5·18 기념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뾰족한 대한 없던 존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5·

18 기념재단은 교육(5·18 교육자료개발 등)·교류협력(광주아시아포럼 및 국내외 연대)·학술(5·18 연구지원 등)·진실규명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의 핵심사업들이 머지않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5·18 기념재단의 핵심사업과 유사한 각종 공익사업이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등에 의해 진행되거나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87만9043페이지 분량의 5·18 관련자료의 기록·전시·연구공간으로 사용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오는 5월 개관 예정)을

직영체제로 운영한다.

시가 직영체제로 결정된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군사법기관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국가보훈자료, 미국 5·18 관련 비밀해제문서 등 5·18 관련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돼 민간위탁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5·18 교육관 위탁을(사)5·18 구속부상자에 맡겼다. 5월 정신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교육장인 5·18 교육관에선 초·중·고교생 등을 상대로 민주·인권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애초 이들 공익사업의 성격이 그간 추진해온 핵심사업과 유사한 점을 감안, 미래발전 전략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맡아 운영 하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설 민주평화교류원의 사업도 5·18 기념재단의 교류협력 사업과 유사하다. 민주평화교류원은 5·18의 핵심가치를 아시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공연·전시·포럼 등 다양한 교류사업과 5·18 10일간의 항쟁을 다룬 예술적 콘텐츠 등을 제작·전시한다.

5·18 기념재단의 핵심사업과 유사한 각종 공익사업이 다른 기관에 의해 운영되면서 5·18 기념재단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문제는 5·18 기념재단이 존재 위기에 몰렸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5·18 기념재단이 위기 의식을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주도적으로 5·18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전 입찰 비리 수사로 전선 확대...정기적 상납 조사

검찰, 7명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

검찰이 한전 지역사업소별 공사 뒷돈 비리의혹에 이어 입찰 비리에 대한 수사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 뒷돈 비리의 경우 '직원 개인 비리'가 아닌,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상납'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중범)는 29일 한전 나주시사 전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관련, 전 지사장 노모(53)씨 등 한전 직원 7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지사장을 비롯, 전력공급팀장·배전차장 등 5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수수액이 적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김모(45)씨 등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6명(4명 구속)도 한전 직원들에게 8000여만원에서 3억1000여만원까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업체들은 총무를 두

고 전체 공사액의 2.5~4%씩 돈을 모아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했고 매월 초 한전 지사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지사장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전 전력공급팀장(48)은 20차례에 걸쳐 7100만원, 전임 팀장(50)은 3900만원을 상납받았고 전·현 배전차장은 5200만~81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기공사업체들의 경우 2년마다 이뤄지는 계약에 따라 한전 협력사로 선정되면 이후 이뤄지는 1건당 8000만원 이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고 한전 직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어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매월 초 해당 지사 직원들은 두 번째의 '월급'을 업체로부터 받아왔다"면서 "최고 관리자인 지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직급별로 액수를 달리해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관행이 나주·영광지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뤄져온 정황을 확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검찰은 또 입찰 과정에서 비리 혐의와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추궁의 칼이 들어다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진행된 '2015~2016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대표 3명이 19개 회사 명의로 협력업체 지위를 확보한데다, 이들을 포함해 무려 30여개의 협력업체 지위를 10여개 업체가 차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 입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구속된 나주 S업체 대표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인 7개의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됐었다.

한전은 이와관련,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또는 무보직 조치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횡단보도 신호등만 제 때 고쳤어도...

파손 10일 지나도 보수않고 방치

길 건너던 고교생 2명 교통사고

어린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하거나 초등학생 통학로 주변임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흡한 교통 행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초등학교 인근 왕복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16)양 등 2명이 서모(59)씨가 몰던 택시에 치였다. 김양 등은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학생들이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경찰은 지난 19일 고장난 신호등 보

수를 광주지방경찰청에 의뢰했지만 부품이 없어 보수가 미뤄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29일 낮 12시10분께 농성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김모(8)군 형제가 이모(55)씨가 몰던 1t 화물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횡단보도는 어린 학생들이 이용이 잦은데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시 남구 백운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등이 파손된채 방치(검은 점선)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김모(여·16)양 등 2명이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이 횡단보도는 광주경찰이 수리를 미뤄온 탓에 10일이 넘도록 신호등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도VTS 관제 소홀 피해 확대 인정 어려워” 센터장·직원, 집유·선고유에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의 관제 소홀 등 잘못으로 참사 피해가 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29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협의,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 및 주말에 1명이 관제 업무를 도맡은 '변칙 근무'의 경우 해당 시간 내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월호 침몰 당일(4월 16일) 오전 8시 15분부터 9시까지 이뤄진 근무행태의 경우 야간의 변칙 근무행태가 오전까지 이어졌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고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VTS 직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 등 직원들에게 내려진 선고형량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국 누빈 2인조 담배도둑 밀미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렌터카로 한 달 동안 1만km를 달리며 담배 수백보루를 훔친 2인조가 나란히 철창행.

○29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박모(53)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5시 완도군 완도를 군내리 G마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450보루와 현금 600만원을 훔치는 등 제주, 통영 등 전국을 오가며 4차례에 걸쳐 담배 850보루(시가 2540만원 상당) 등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전주의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것이 드러나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이) 훔친 담배를 대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행상으로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절도 물품의 정확한 처분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희망가격 제시 하십시오 가능한 매매 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